

2026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법률 실무 특강

청년창업농이 알아야 할 법률·노무 상식

2026. 10. 15.

법무법인 연

변호사 권오승

오늘 강의 구성

1부

1

창업 설계

경영체 등록
개인 vs 법인
동업계약서

2부

2

정책자금·
지원사업

정책자금 내용
영농정착 의무
부정수급 처벌

3부

3

시설 계약과
판매

스마트팜 시공
발떼기
온라인 직거래

4부

4

브랜드·
손해배상

상표 출원
농약 비산·보험

5부

5

첫 직원
채용 노무

구인
4대보험
명세서

청년창업농, 창업 단계마다 법을 만납니다



단계별 적용 법령

농어업경영체법
민법(조합)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민법(도급)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식품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재·고용보험법

요약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은 다르지만, 분쟁을 막는 공통 수단은 '계약서 · 신고 · 기록'입니다

PART 1

창업

농업경영체 등록 · 개인 vs 법인 · 동업계약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 모든 지원의 출발점

농업경영체 등록 =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록 필수

직불금·지원사업·정책자금의 전제
생산수단·품목·사육 규모 등을 등록



유효기간 3년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
기간 관리 안 하면 지원 공백



14일 내 변경신고

품목·면적·사육규모·소재지 변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변경신고

⚠ 영농정착지원 수혜자라면 더 엄격합니다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지원금 지급기간 1개월 차감 → 3회 누적 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2026 시행지침)

1부 |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구분	개인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책임 범위	사업상 빚 전부를 개인 재산으로	구성원은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
의사결정	혼자 즉시 결정	총회·이사회 등 정관 절차
투자 유치	사실상 어려움	비농업인 출자 가능 (법정 한도 내)
운영 부담	간편	설립·변경신고, 시·군 실태조사 협조
승계·이전	재산을 하나하나 이전	지분 양도 (정관 절차 필수)

1부 |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주된 목적	협업으로 공동 생산·출하·가공·수출	농업경영·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설립	농업인·생산자단체 5인 이상 조합원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설립 (1인 가능)
비농업인	준조합원으로 출자 (총회 의결권 없음)	총출자액 80억 이하 : 90%까지 총출자액 80억 초과 : 총출자액 - 8억까지
성격	법인이지만 민법 '조합' 규정 준용	상법 '회사' 규정 준용
이럴 때 적합	뜻 맞는 농업인 5명 이상이 함께 생산·출하할 때	혼자·소수로 시작해 투자를 받아 가공·판매를 키울 때

요약 함께 짓는 농사는 영농조합법인, 투자로 키우는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 어느 쪽이든 정관이 분쟁을 좌우

1부 | 친구와 함께 창업한다면 — 동업계약서 7개 조항

" 친할수록 글로 남깁니다 "

①

출자

현금·농지·장비·노무를 얼마로 평가할지

②

역할과 보수

누가 무엇을 맡고 얼마를 받는지

③

손익분배

분배 비율과 정산 주기

④

의사결정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항

⑤

탈퇴·지분 환급

나갈 때 지분 계산 방법

⑥

경업금지·브랜드

브랜드·거래처는 누구 것인지

⑦

분쟁 해결

협의 → 조정 → 소송 순서와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 둬

근거: 민법 제703조 이하(조합), 제719조(탈퇴 조합원 지분 계산)

1부 | 동업 분쟁, 판례로 보기



영농조합법인 지분, 돈을 다 내도 무효?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78501

사실관계 준조합원 지분 5,600좌를 2억 5천만 원에 샀으나, 정관상 필요한 총회 승인 의결이 없었음

법원 판단 영농조합법인 지분 양도에는 민법 조합 법리가 적용. 정관상 승인 없는 양도는 확정적 무효

▶ 돈을 다 냈어도 정관 절차를 안 거치면 지분은 내 것이 아님

판례 1



동업에서 나갈 때, 내 몫은?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사실관계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명이 탈퇴하며 자기 몫(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

법원 판단 탈퇴 지분반환은 해산·청산과 별개.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그 재산 상태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 동업 통장·장부를 따로 두지 않으면 나갈 때 내 몫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

판례 2

PART 2

정책자금·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 의무 · 환수 · 부정수급

2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한눈에



최장 3년 · 총 3,600만 원 (독립경영 1년차 선정 기준)

받는 순간 생기는 약속

의무영농기간 = 지급기간 + 같은 기간 더
→ 3년 받으면 6년간 영농에 종사
지침이 바뀌면 기존 선정자에게도 적용

사용 규칙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현금 인출·계좌이체 불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잔액은 이월 불가

자산 취득 금지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농지·농기계 등
유형·사치품 등 용도 외 사용 금지

2부 | 수혜자 8대 의무와 제재

① 의무영농

지급기간 + 같은 기간

② 전업적 독립영농

상근 취업·위탁 금지

③ 영농계획 이행

변경은 사전 승인

④ 성실 신고

변경 14일 내 신고

⑤ 지원금 성실 사용

용도 외 사용 = 환수

⑥ 의무교육

1년차 필수 28시간

⑦ 재해보험 등 가입

주품목 기준 가입

⑧ 경영장부

익월 25일까지 제출

위반하면 — 제재는 4단계로 무거워집니다

지급 일시정지

장부·서류 미제출



지급기간 차감

교육 미이수·미신고



자격 박탈

거짓 신고·개선 불가



지원금 환수

의무 위반 비율만큼

2부 | 부모님 땅에서 시작하면? — 독립영농과 허용되는 겸업

❌ 독립기반 불인정

배우자에게서 임차
본인 부모에게서 임차
배우자 부모에게서 임차
타인과 공유지분으로 소유
(지분 비율 무관)

⊖ 의무기간 중 금지

회사·공공기관 상근 취업
휴경, 가족·타인에게 위탁하고 이탈
대학·대학원 입학
퇴직급여 대상이면 '장기근로'로 봄

✅ 사전승인 시 허용

영농에 지장 없는 단기 근로
원격·야간·월 60시간 미만 과정
자가생산물 가공·체험 사업자등록
드론 방제 등 농업서비스
일부 지붕 태양광

💡 승계농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 부모님 소유 농지를 빌려 시작하면 독립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2부 | 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사건임

위반 행위	국고 (보조금법)	시·군 (지방보조금법)	법정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제40조	제3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다른 용도로 사용	제41조	제3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환 + 제재부가금	제33조의2	제35조	반환액의 5배 이내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흔한 유형

업체와 짜고
견적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페이백

허위
세금계산서

2부 |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 임의 매도 불가

보조사업이 끝난 뒤에도,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이하 행위 금지

중요재산이란? (예시)

① 부동산과 그 종물 — 법령상 당연히 포함

예)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 보조금으로 건축한 저온저장고
·축사·가공시설·고정식 온실

②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한 재산

예) 농기계·장비 → 교부결정서·고시에서 지정 여부 확인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 제공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조금 반환 명령

후계농 자금을 목적 외로 쓰면 회수 명령 + 영농정착 자격
박탈

승인 없이도 되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

기관장이 정한 내용연수(기간)가 지난 경우

팔거나 담보로 잡히기 전에 시·군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2부 | 보조금 사건, 판례로 보기



"자부담은 우리가 알아서" — 전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1228

사실관계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에서 시공업자가 자부담금을 농민에게 송금하고, 농민이 그 돈을 다시 업자에게 입금해 '자부담 완납'을 꾸밈

법원 판단 농민과 업자 모두 사기·보조금법 위반 유죄. 보조금을 실제 온실 공사에 썼더라도 자부담 요건을 속인 이상 위법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판례 1



시·군을 거쳐 받은 돈도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사실관계 국가가 지자체에 준 보조금을 지자체가 다시 민간에 지급(간접보조금). 수령자는 '국가에서 직접 받지 않았다'고 다툼

법원 판단 간접보조금 수령자도 보조금법 처벌 대상. '부정한 방법'은 정상 절차로는 못 받는데 교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전부

판례 2

PART 3

3 시설 계약 및 판매

스마트팜 시공 · 농기계·자재 · 발떼기 · 온라인 직거래

3부 | 스마트팜·시설 시공계약 7대 체크포인트

①

시공사 자격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②

설계도·사양서

장비 모델명까지 계약서에 첨부

③

기성금 지급

공정별로 — 과다한 선급금 금지

④

준공·시운전

검사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⑤

하자보수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확보

⑥

지체상금

공사 지연 시 하루 배상률

⑦

보조사업 기간과 공기 맞추기

공사가 늦어 보조사업 기간을 넘기면 보조금 자체가 위험

3부 | 농기계·자재 구매와 리스



할부 구매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

농업용으로 산 농업인도

'소비자'로 보호됩니다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 미리 확인

만기 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 지

보조받은 장비면 중요재산 지정 여부 확인



불량 종자·비료·자재

남은 제품·영수증·로트번호 보관

같은 조건의 다른 제품과 비교 기록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청구

근거: 할부거래법 제3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민법 제580조·제582조(매도인 하자담보책임, 6개월 권리행사기간)



발아 안 된 표고버섯 종균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사실관계 농가들이 조합에서 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했는데 발아율이 정상의 1/100에도 못 미침. 원심은 하자 증거 부족으로 농가 패소

법원 판단 파기환송. 다른 곳에서 산 종균은 같은 조건에서 정상 발아한 점 등으로 하자 인정.

판례

3부 | 포전거래(밭떼기)·계약재배

포전거래(밭떼기)란? 수확 전 밭에서 자라는 상태 그대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한꺼번에 사고파는 거래

밭떼기 법률 규칙

지정 채소류 등은 서면계약 의무 · 표준계약서 준용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안에 안 가져가면
→ 특약 없으면 계약 해제로 간주
(매수인이 약정일 전에 서면 통지하면 예외)

계약재배(계약거래)란? 심기 전에 구매자와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해 생산·출하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거래

계약재배 필수 조항

가격 결정 방식 (고정가·시세 연동)
등급·검품 기준
태풍·병충해 등 불가항력
수취 거부 시 처리 방법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3항(포전매매), 제6조 제1항(계약거래)



꽃대 올라온 봄배추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56749

사실관계 유통업자가 봄배추 7,000평을 4,690만 원에 밭떼기로 샀는데 꽃대(추대)가 올라와 팔 수 없게 되자 농민에게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 청구 기각. 작물 상태에 따른 위험은 매수인 부담, 재배 농민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판례

3부 | 온라인 직거래 ① 신고·환불·개인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둘 중 하나뿐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면세 농업인은 간이과세자가 아님

→ 50회 넘으면 신고

↔ 청약철회 (환불)

원칙: 받은 날부터 7일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 재판매
곤란'하면 제한 가능

**단,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표시
해야**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고객 개인정보

주문 정보는 배송에만

홍보 문자는 별도 동의

송장·주문서 파기 관리

단골 명부도 개인정보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2항 제3호·제3항·제6항,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법

3부 | 온라인 직거래 ② 표시·광고 — 3대 형사 리스크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 1억 이하

징역·벌금 병과 가능

인증 없이 '유기·무농약'

3년 이하 / 3천만 이하

표시·광고 모두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년 이하 / 1억 이하

'당뇨에 효과' 등

근거: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4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제5호·제11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제26조 제1항

옛 기준 (구 식품위생법, ~2019. 3.)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만 처벌

→ 널리 알려진 효능 소개는 무죄 취지 : 간마늘 - 위염, 위궤양(2005도844), 소금 - 알츠하이머 예방(2015도6207)



현행 기준 (식품표시광고법, 2019. 3. 14.~)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만 있어도 금지
질병 예방 · 치료 효과 · 증상 개선 · 질병정보로 연관성 암시
(시행령 별표 1 제1호)



"디톡스" 문구 금지는 합헌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28

사실관계 저염·저당 식품 온라인 판매자가 '디톡스' 등 문구를 못 쓰게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직업·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헌재 판단 기각(합헌). 국민 건강 보호 목적이고, 잘못된 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만 금지하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님

헌재

PART 4

4 브랜드, 손해배상

상표 · 농약 비산 · 보험

4부 | 농장 브랜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주인

선출원주의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1. 키프리스 검색

www.kipris.or.kr

상세검색 → 권리별검색 → [상표] 탭



2. 상표 출원

상품 분류를 정확히 지정
(농산물 31류, 가공식품 29·30류 등)



3. 패키지 제작

출원·등록 후에
디자인·인쇄

등록이 어려운 이름

상품의 보통명칭만

예) '사과', '꿀'

산지·품질·효능만 나타낸 이름

예) '꿀맛 사과', '유기농 쌀'

현저한 지명만으로 된 이름

예) '○○군 사과'

예외와 주의

① 오래 써서 유명해지면 예외적으로 등록

출원 전부터 써 와서 소비자가 '그 농장 상품'으로 알아보면 그 상품에 한해 등록

② 지역 생산자 법인은 지명도 등록 가능

생산자들이 함께 세운 법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

③ 이미 등록된 지역 특산물 명칭과 비슷하면 불가

실무 팁: 지명·품목에 고유한 이름을 결합 → '○○군 햇살담은 사과'처럼

4부 | 이웃과의 분쟁, 그리고 보험

농약 비산 (드론 방제 포함)

뿌린 농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바람 확인 · 이웃에 사전 고지 · 완충지대 확보
피해 친환경 농가: '비의도적 오염' 구제
증명자료 내면 인증기관은 재심사 의무
검출돼도 1·2차 시정조치, 3차에 인증취소
→ 사진·시료·풍향 기록을 바로 확보

상린관계 · 생활방해

악취·소음·진동 등엔 '적당한 조치' 의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맞는 정도는 참아야
기준은 '수인한도' — 넘으면 배상·방지청구
환경오염 원인자는 과실 없어도 배상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 2016다35802)
→ 소송 전 마을 단위 조정 먼저



고속도로 소음에 양돈장 폐업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사실관계 도로 확장으로 양돈장과의 거리 65m→25m, 소음 45~55dB→평균 75dB. 돼지 1,600두 양돈장 폐업
법원 판단 적법한 공사라도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 → 배상책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 농장은 피해자도, 가해자(악취·농약)도 될 수 있음. 기준은 '수인한도'

판례

농작물재해보험

영농정착 수혜자 주품목 가입 의무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농업근로자 작업 중 재해

배상책임보험

드론·농기계로 남에게 준 피해

PART 5

첫 직원 채용 - 노무

인력 구하는 법 · 4대보험 · 임금명세서

5부 | 일손 구하는 방법별 — 누가 '사장'인가

	① 가족	② 직접 고용	③ 인력사무소	④ 농촌인력중개센터	⑤ 공공형 계절근로
어떤 곳	함께 사는 친족	농가가 직접 모집 (상용·일용·알바)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시·군·구 등록)	농협·지자체 공공 중개 (중개 수수료 없음)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 농가에 하루 단위로 배치
사장(사용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농가	농가 (사무소는 알선만)	농가 (센터는 연결만)	농협
임금은	—	농가	농가 (사무소가 대신 줘도 '대위지급')	농가가 직접 지급 (교통·숙박비는 센터)	농협이 지급 (농가는 작업비 납부)
주의	외부인 1명이라도 쓰면 적용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	임금·재해보상 책임은 농가	근로계약 당사자도 농가	현장 안전관리는 농가도 함께



인력사무소가 일당을 줬다면 사장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사실관계 인력공급업체가 일용직 일당에서 알선수수료를 떼고 먼저 지급, 현장 출력 인원도 관리

법원 판단 유료직업소개로 알선했다면 사용자는 인력을 받은 쪽. 일당 선지급은 '대위지급'일 뿐 → 원심 파기

▶ **인력사무소에서 온 일꾼의 사장은 농가임. 일당·재해 책임도 농가 부담**

판례

5부 | 4대보험, 농업은 무엇이 다른가

보험	개인 농가 (법인 아님)	농업법인
산재보험	농업(별목 제외)·개인·상시 5명 미만, 모두 충족시만 제외 → 승인받아 임의가입 가공·판매 등 농업이 아닌 사업에 쓰는 직원은 1명부터 의무	직원 1명부터 당연적용
고용보험	상시 4명 이하면 적용 제외 → 가입 희망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 (2024. 7. 1.~) 상시 5명 이상이면 당연적용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제외	직원 1명부터 당연적용 (시간·연령 기준은 동일)
국민연금	농업 예외 없음 →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가 사업주 본인도 사업장가입자가 됨	개인 농가와 동일
건강보험	농업 예외 없음 →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 1명이면 적용 사업장, 14일 안에 신고 농가 사업주 본인도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바뀜	개인 농가와 동일

근거: 산재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제2조의2 / 고용보험법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제8조, 시행령 제2조·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7조, 시행령 제9조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5부 | 산재보험 없이 사고가 나면

① 의무가입인데 신고 안 한 상태에서 사고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그대로 받음

보험관계는 신고와 상관없이 의무가 생긴 날 이미 성립
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액의 50% 징수

그 기간 보험료의 5배 한도 · 요양 시작 후 1년 내 청구분
+ 밀린 보험료, 미신고 과태료 300만 원 이하

② 임의가입 대상(개인·5명 미만)이 미가입

산재보험이 없으니 농가가 직접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요양비 전액 · 휴업 중 평균임금 60%

장해보상 · 사망 시 유족보상 1,000일분 + 장례비 90일분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③ 사장님 본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농업근로자의 농작업 중 사고·질병 보장

국가가 보험료의 50% 이상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

④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 직원 없는 사업주도 가입

배우자·4촌 이내 친족도 요건 갖추면 가입 가능

공단 승인 필요 · 보험료 체납 중 사고는 지급 제한

5부 | 계약서는 처음 한 번, 명세서는 매달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전자문서 가능) 교부

구성항목 · 계산방법 · 공제내역

5인 미만 · 일용직도 포함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자명부

3년 보존



임금대장

3년 보존



근로계약서

3년 보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무료 양식 활용 - <https://www.moel.go.kr/wageCal.do>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제48조 제2항·제1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마무리 | 청년창업농 법률·노무 체크리스트

창업 준비

- 경영체 등록·변경신고 14일
- 동업계약서 작성
- 법인이면 정관 확인
- 상표 검색·출원

지원사업 수혜 중

- 경영장부 익월 25일
- 의무교육 이수
- 겸업은 사전승인
- 보조 시설 처분 금지

시설·판매

- 사양서 계약서 첨부
- 하자는 바로 기록
- 통신판매업 신고
- 효능 광고 금지

첫 직원 채용

- 사용자가 누구인지
- 4대보험
- 임금명세서 매달
- 근로계약서 작성

Q & A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연 · 변호사 권오승